第２主題 討論要旨

安京燁(사회자): 제2주제 토론은 먼저 張明奉 국립대 교수께서 통일협법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죠, 두번째로 고려대의 崔連坤 교수께서 이산가족의 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身分上的諸問題, 세번째로 서울대의 胡文樑 교수께서 민사재판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번째로 서울대의 韓永洙 교수께서 계약재결 특히 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죠, 다섯번째로 연세대의 金性洙 교수께서 경제제정

력의 남북간의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특히 조세문제에 비중을 두시겠습니. 여

섯번째로 申維淵 변호사께서 남북 상호의 무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고, 일곱번째로 申

培植 법무부 검사로서 재산권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 다음

으로 서울대 金建植 교수께서 상거래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겠고, 마지막으로 鄭謹文 동

아일보논설위원과 서울대의 南宮鎬 교수께서는 전체를 중합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인급이 있었습니. 우선 張明奉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

겠습니.

張明奉(국민대): 우선 기존적으로 통일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습니. 여기

서 말하는 통일을 법적, 제도적 통일만을 전체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족통일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통일, 즉 제도적 통일, 법적 통일로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습니.

따라서 민족통일의 차원에서는 평화적 통일과 함께통일을 전체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전체적 출발점에서 서서 협력적, 법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국제정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도 상당한 변화의 와중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혐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지난 4월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열린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수정이 있었고 합니다. 그간

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제 나라대로 분석해 보면 북한의 정치이념과 관련된 조항, 예컨대

헌법 제4조의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이나 제5조의 대남통일전략 내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했음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내통노선, 통일목표에 걸쳐 변화가

없다고 보는 단정적 시각으로는 문제점귀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통일과 관련한 헌법문제로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

토조항은 그 입법의 취지나 관계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근거규정으로 인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영토조항과 통일정책의 실제로의 틀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혐법

문제에 나와 있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갖는 의미를 외세에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 독일의 연방헌법제관소의 관대한 형법문문을 정회방 이익의 뿐만 아니라 범죄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우리나라 전문의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대한 범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범죄보다 경비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상충문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당한 범위내의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차간에는 범죄가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조화있게 경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릅니다. 그 대안으로서, 규제할 필요성 에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내용은 협력에 통합하고 그 외의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경비하는 방향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崔建坤(고려대): 가족법 분야에서는 큰 혼란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예전에, 이전의 배우 자를 만난데 된 경우입니다. 이식한 경우에 이래 또는 전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교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한 전교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전교적이지만. 그런데 현재 남북은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족의 결합을 없게 합니다. 이 문제는 회의의 민족정서에 관련된 가합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교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 전교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전교 중에서 보호의 가치가 보다 많은 측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 중 마지막의 방법을 위해서는 1968년 7월에 사론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구별적 인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례의 믿음이 우선적 인가 하면 인권이 있는 인간의 경우를 가장 법적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죄의 규범적 경계에 어느 정도 인정되었는가를 의문시한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남북은 전교를 해서 이리 저리 두고 있는 사람이 복잡의 옛날 아내를 만난 경우에 외면 어계 범죄 규범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래 또는 전교의 경우, 가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남북의 부부관계시략이의 모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경제적 관계에 관계하여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또는 전교의 경우, 부부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복잡은 절차를 포함하여 이래 또는 전교관계를 법적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당연히 이래 또는 전교관계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아나가 상속문제, 부양문제로 연결됩니다.

또한 양자제도도 문제가 됩니다. 복은 전전양자제도를 취하여 일단 일인이 되면 생가와 의 모든 청용관계가 난복되는데, 우리와는 1968년 7월에 전교한 생가와의 청용관계를 남아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양자간에 상충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는 가족상봉의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하용하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부양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 의한 민법 제771조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개별적 한정주의를 취하고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 친족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범위와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사촌 이내의혈족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는 반면, 복족은 형식적으로는 혈족 무한주권로서 가까운 친족순서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상속 순위에서도 남복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 제1순위자로 혈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자는 혈계존속과 배우자로 되어있는데, 복의 경우에는 제1순위자가 배우자, 자녀 및 부모로 되어 있고 제2순위자는 소나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입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범위가 상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는 양법의 해석을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하여서 양자간의 조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방법에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충돌을 해결해 주는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 통일과정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者: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허문철 교수님에서 사법제도상의 문제점 토의 민사 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문철(서울대): 한국의 국가가 통일하게 되면 당연히 사법부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통일된 사법부구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 동독의 서독에의 홍수통일과 같은 경우와 양체제의 전주권 통일의 경우에 따라 그 논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에 민사재판제도의 통일을 검토하기 이전에 남북간의 현실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 분리의 전제아래 자유주의·개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북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의 재판구조설정을 흉내낼 경우, 재판기관이란 내외 채택분자들의 파벌적 통제를 철저히 신장하고 노동당을 응호보위하고 조사회를 위기한 주체상으로 이색화하는 것을 그 일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보호자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소는 모든 일문을 혼동한 공산주의혁명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주석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제분립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북한헌법 제134조에 관사는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재판소판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재판소판사는 지방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을 보면, 민사소송법은 프로테스탄트독재의 무거이다. 민사재판의 귿리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법에 따라 정치적 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의 협박 저해를 발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의
분론주의와는 반대인 취직공정주의가 적용될을 알려 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민사사전에서 특히가 강하게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검사가 감사기능을 담당한는 검사가 민사사전에서 특히가 강하게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가 강하게 되어 있는 점은 공정과 민사사전에서 특히가 강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민사사전의 허위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공정과 민사사전에 대한 검사가 감사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리고 제판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이 소송절차의 사전에 요구되는 정지사항증에는 "공정투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제도의 내용에 나타나기 전에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정 17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사법제도와 도덕적 절충함이 가장 없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도덕적 우리가 그들의 규정에서 배울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이 배울게 된다면, 공신의 법규정이 아주 심한 점입니다. 예를들면, 그들은 "기념과" 혹은 "죽음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법에 나타난 이념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그들의 영향한 그룹 같은 법규정과 우리의 법규정 같은 법규정과는 도덕적 절충함에 잡혀들지 않아도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 통일의 형식이 어색하며든간에 사법부구조의 문제에는 관할 한 현재 우리 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북한의 장래 전망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 타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강자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외국의 투자에 따라 가능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를 시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지시하는 소송절차나 "공정투쟁"의 방법을 외국에서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제도적 개선을 중용하는 것이 더 나ろう고 본다.

그 다음은 법조인문제입니다. 통일이 된 이후 북한의 판사·검사 등의 처리문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단연히 법조인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겠으나, 우리의 소송제도를 관찰한다면 그들의 제계속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시 통일의 예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에 이전에 통독의 법관들은 자신들이 이념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서독의 민법 등이 즉각 적용되더라도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합리적인 제판을 하였다가 적절한 정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서독사람들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이하안지, 그들의 법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관의 선출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락지, 그들의 민사제도의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좀 더 알아야 북한의 현재 법조 인들에게 대한 처리문제가 제대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잘못 하므로 그들 중에 일부를 제 및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이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남북한 교류과정에서 제판제도, 사법제도의 용이가 이루어 지도록 북한을 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해 놓으면 통일되면서 법조인의 태극이나 교육 등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司会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시간에는 오전에 곽준연 교수님의 막론도하고 저방향의 토론자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곽교수님께서는 "남북통일교류문제 중심으로"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이후 조국주의의 사회주의의 양극단의 충돌이 있음을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조선소련계 흠희등밀화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폐쇄의로의가처럼 사회주의개방체제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동해야 한다고 보습니다.

다음은 양창수교수께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판결판결범, 판결기관, 준법, 강제이행 또는 불이행의 체제 등의 문제를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梁彩珠(서울대): 저는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의 관심이 휘젠선 이남의 범죄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전에 원복자와의 제작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론의 하나의 흥미거리로만 생각하였던 점입니다. 이를 제기로 제 자신의 관심을 확대해 보러는 시도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생각하시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주민, 북한기업이 우리 법률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현실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속함의서를 보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인으로 등록한 상사·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부속합의서 제 1조 4, 5항). 그런데 북한에서 범인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인이 우리법상 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우리 범인등기부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지, 그리고 북한의 범인도 우리와 같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편 남북교류시에 환경하게 된 선박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 지도 문제가지 않으나, 형법적으로 압수자란 압류 등을 못할 바는 있지만 판례이마사한 것이 있으면 이를 구속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가 논의되어야겠습니다.

부속합의서나 기타 교류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그 규정이 어떤 점이나 방식에 관한 것이고 또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내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된 손해를 기피에서 첨부해 수수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마저 '교류관련기금회'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된 손해를 기피에서 첨부해 수수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의 교류를 충진하기 위한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단지로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극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협교수님께서는 경제교류를 통일정책의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것뿐 아니라 통일 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작업도 함께 되어야 하.
지 않나 여겨집니다. 예컨대, 경제기 관에 관한 것으로서 부속합의의 뒤에 따라 경제운영을 지정하여 집단적으로 계약이행을 보장하게 하는 경우, 통일후에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문제가 됩니다. 즉, 통일 후에 계약당사자와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일의 과정에서는 물론 목표의 경험을 따라 중재협의에 대한 규정이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여러 절차적 규정을 정할 수 있었으나 이와 아울러 통일 후의 모습에 대비한 작업도 동일하게 관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나 통일 이전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여 온 국제거래의 관행을 여전히 강조하여야 하고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끝이겠습니.

이상도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연세대학교 金性洙 교수님께서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 внешне계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 중에서 남북간 경제적협력교육회를 위한 방안을 조세법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金性洙(연세대) : 제 2 주제: ‘남북교류협력본격화시’ 탄 남북경협화시에 채결이후에서부터 남북간 정치적 통합이 일발적 시기까지의 과목의 시기를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간동안 남북간의 경제적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측의 시장경제자유화와 달리 북측이 여전히 이를 도입하지만 양자간의 경제적관계는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제적관계는 결국 남북간의 경제적 차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남북통합시의 북측의 경제적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동서독의 경제에서 여실히 나타난 사례입니다. 이때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서독은 동독에게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하였으나 동독의 경제·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하였음을. 이러한 동서독간의 경제적 협력은 화폐제도동등의 체조약이 그 두편 전에 “화폐경제사회공동체조약”이라고 두편 전에 “통일기본조약”입니다. 이 두 조약을 통하여 약 1,500억 DM경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보면데, 남북간의 교류가 경상적인 휴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남북교류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남한주민·법인 동에 지원하는 남북교류기금을 북측에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합니다. 또한 통일이 일각한 상황에서는 통일후의 일정간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외부적 규제를 줄 허용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방교부제 등을 규정한 개별법규를 북한과 협상하여서 북한에도 확대, 적용해 주면 어려가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간의 경제적·재정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조세법체계의 폐쇄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북한은 조세제도를 자본주의적 인민수탈수단으로 이해하여 이를 외부로 폐지하였는데, 오전의 《표준법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 규정이 개정되어—“형평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다(제33조)”——북한에는 조세제도가 자족감도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조세
제도를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런데 통일전후로 하여 지원된 막대한 경비는 결국 우리의 개인이나 기업에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귀착되어 우리의 경제에 저감은 위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감세능력에 따라 납세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조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감세능력에 따른 납세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 직점성, 소득세 등의 조세관리법률 이러한 납세원칙에 따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통일과정에서 남북간의 소통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조세제도에 대한 우리의 법제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그 대로 통일을 앞당가는 좋은 제기이 된다고 봅니다.

**司會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申雄淳변호사께서 "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申雄淳변호사**: 네,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낙후교육이 take-off단계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다 실무적인 절차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rule of game에 해당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투자와 관련하여서 세 경계를 둘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이 남한에 투자하는 경우, 둘째 남북한이 합하여 제 3국에 진출하는 경우, 세째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북한이 남한에 투자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자도입법」을 적용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설계적인 문제는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에 관련된 법으로는 「남부형투자기관법」이 있는데 이 법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의 기업이 남한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은 二元의인 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정무원에서 「나진·선봉자유 무역경제지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정무원 결정 74호). 그 명목은 외의도의 10배 가량됩니다. 제가 그 곳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5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1984년의 「함영법」이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한의 투자와 관련하여 법규문체가 특이 중요한 것은 합리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법 제18조는 생산수단을 모두 국가소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도 기업체가 경영상 관리권만을 가지고 있지 소유권은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체간의 매매라는 것도 단지 경영상 관리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허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1982년에 북한산박 허가가 압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A라는 외국회사가 북한의 런이라는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북한의 B회사가 아닌 C회사....
의 선박을 알려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것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선박이 甲회사나 乙회사의 것이냐는 그림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올해에도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 이제 자본주의국가와 사업을 하게 되면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데 우리가 북한회사와 협력사업을 하게 될 때, 그 회사의 생산시설이 국가소유로 되는지의 문제, 그 회사의 생산물에 대한 체권자의 압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문제 등이 절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구성된 남북조사단에 법률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남북회담에도 법률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북한의 자료를 보다 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 특정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아주 부담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97.98년 법률가들도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가의 인간의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司会者: 네, 그럼 범무부무수법령과 申유철기자께서 “몰수된 재산권의 반환 문제”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申유철(검사): 재산권반환 문제는 독일통일 사례에서 동·서독간 그리고 서독 내부적으로도 격렬하게 논의된 정점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南北基本合意書』 체결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쟁이 가시화되자 실태인들은 그저 몇일의 추억을 달래주던 것에 불과하던 토지문서를 다시 거내놓고 재산권 반환에의 뜨거운 열망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민일반과 학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토지문서에 대한 타산직으로서 독일의 통일에 따른 몰수재산권처리문제를 간략히 개관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재산권반환의 문제가 된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재산권 반환문제처리의 원칙을 선언한 양독간의 공동명령과 통일이후의 관련법률의 제·개정 경과 및 그 주요 내용 및 이 문제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요, 그대로 독일에서의 재산권반환 근황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독일의 처리를 위하여 동독지역을 45년부터 49년까지 경계하면서 1945.10.31자 나치가 전범의 재산물수에 관한 군사정부 명령 제124호 등의 의거 국유화 및 토지제도를 단행함으로서 동독 전제도치의 1/3에 해당하는 32만 ha을 몰수하고, 48년 중반까지 기업등 산업재산의 2/3을 국유화하였고, 되어 1949.10. 동독정권이 수립되자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중심으로 국유화정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80년대에 들어서 사계제재산은 3~5%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산주의의 백그림에 의해 소위 “비합법적(illegal)”인 방법으로 동독지역을 밀난 피난민, 이주민, 외국인 등의 재산은 1952.7.17자 재산권 보전명령 등에 의하여 강제로 국가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통일과 더불어 이러한 범법적국가적 방법에 의하여 박탈된 재산권의 처리를 둘러싸고 반환과 보상
가운데 어느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통일 정책은 1990.6.15
양복대표는 불수제산처리에 관하여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골자
는 (1)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소련군의 점령권에 의하여 불수령 제산은 반환하지 아니한
다. (2) 불수 또는 국가의 강제관리로 전환된 제산은 원칙적으로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반환하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경우 공공 또는 공동주거용에 제공되거나 기업의 일부
로 편입되어 용도가 변경될 경우와 양도가능한 부동산을 서의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원소유자는 원상회복 대신에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군 점령하의 불수제산
에 대한 예외규정은 소련과 동독정권이 동일조약과 2+4조약 협상과정에서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이러한 방침을 서독측에 관철시킨 것인데 서독정부는 통용에 따른 대외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통독의회에서 국가보상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수락한 것인
다. 이에 대해서 불수제산의 원소유자들이 위헌이라고 형법소송을 하였는데 연방헌법재판
소는 작년 4월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합헌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서독 국가인권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지역에 미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서독소련정권이 행한 불수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져서 않으므로 기본법 제14조의 제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다만 기본법 제3조의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입법권자는 사
후보상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여야 하고 또한 기본법 제79조의 기본법 개정 불가 사유에
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 합헌판결은 소련군 점령하의 무보상 국유화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배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와의 문제인데 제산권의 처리문제는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양복간에 해결되
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해결제산문제 (offene Vermögensfragen)"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
상외부 원칙과 관련하여 서독 내부에서는 연방법무성은 기본법의 소유권 존속의 제도를 중
시하여, 제무성은 보상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어 찬성하였으나 경제성은 제산권 관
계의 신속한 확정과 동독지역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노동조합측은 실업문제 발생등을
이유로 반대로 나선 보상무한 원칙을 시사하였습니다. 위 공동성명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해
결제산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90.8.31 미해결제산문제에 관한 법률, 약칭 제산
법이 동일조약의 구성분문으로서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제산권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산권 반환청구 신고령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현재의 권리자는 신고제산에 대한 물리적
법률행위 또는 장기간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체결을 중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령 제6조 제1항은 부동산 양도시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거래명
에 의한 인가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산법은 동독지역에서의 소유권 관계의 확정을 지연시험으로써 동독경제 재
건에 필요한 투자촉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반환무산의 원칙은 건지하되

마지막으로 이혜체제의 반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 115만명이 264만 건의 제산에 대하여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3.2%인 8만 5천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산문제 처리부서는 2천여명이 근무 중으로 그 처리에 최소한 약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차순으로 산출 해서 기예고 규모는 미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다산지서으로서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司書: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 따라사님께 한가지 여수여 보고 실은 것은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 하는 문제입니다.

申培植: 독일의 경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적용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견입니다만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투자의 촉진과 원소유자의 보호라는 이익간의 조화점에서 타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崔正植(법제처 법제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유상판매·유상분배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자들은 일제시대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의 민사법 개념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입법선례가 있는데, 바로 “수복지역토지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에 의
한편,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용어의 통일, 국제거래형식의 사용 등이 요구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해결위원회」같은 기구를 두는 것이 좋울지 여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동반자간의 분쟁해결을 향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재재의 없이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부하는 경우 우리와 힘써하지는 국민의 제관비용의 허락을 충분히 잡고 있겠으나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4권 1호 (1993)  第 2 主題 討論要旨

一  
司會者：네, 다음은 鄭錫文 東亞日報 論說委員에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鄭錫文(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자리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몇가지 생각드릴 간단히 스케치해 보리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나온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뿐만 아니라 장차 제정되어질 많은 법령들에 대하여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날부이단위계약 평양에 갔을 때 이인도,&nbsp;&nbsp;송철우문구를 들게 되었는데, 그들은 “문학의 박수성경”을 택한법에 따라 어찌할 수 없느냐도 이인도문은 올려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납득즉, 그들이 일관한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서 그 후에 인도 적자원에서 얘기할 거내도군요.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법이나 제도의 현실을 제대로 주장하더라도 무방하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에로서 저자는 우리의 항의내용을 북축과 협상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통한 검토절차가 거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로 미국에서 SALT의 비준문의 의회를 거쳐서 하였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통한 검토절차가 결국 북축의 우리의 의회제도를 깨닫게 하는 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에 설치하게 된 ‘법률실무협의회’ 문제입니다. 남북 양측이 각자의 법률을 들고 나와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학자들의 관점적인 대가가 참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이에 대비하여 협정·헌법 등의 개정사업이 진행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로 여기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여러 법률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실은 실정법조문 이외에 관행 등의 요소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시간의 설정이 없이 그저 망설여지는 것처럼 행정과 협화되어 갈등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방식으로 통한 이유에 제재문반완변문 논의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지급의 문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게서 따라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가 얘기되어야 우리 자신부터도 협력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지금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북한측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법계정’의 통일전선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또한 북한의 간첩파견과 같은 이중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그러한 시도를 상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司會者：네, 감사합니다. 鄭委員님의 토론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南宮錫卿 교수님에서 이 점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南宮錫卿(서울대)：제 자신이 연구가 부족하지만 남투토보의 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나와있는 영토조항과 평화조항간의 유기적 혼란은 중전의 단
편적인 해석, 관례에 집착하는 해석과는 달리 신선하다고 보입니다.

영토문제를 형법에서 보면 형법의 적용범위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lesser의 문제가
는 간통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원소한 사례에 대한 경질주의적 간통교사에 해당하고, 결혼
한 본인은 간통죄로 의심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를 근거 형법적으로 세기적인 ‘간첩죄’이나 ‘일반범죄에 받지 않는 행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
하지 않는 가법은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전체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형법에서 형법적용범위를 규정한 대한민국영역, 내 휴전선 이남
등 개념의 해석 문제로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왔듯이 결국 대한민국의 영역은 휴전선 이남
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둔 데 원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은 부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국가법·국제법적 국가영토의 개념
과 형법에서의 영토 개념은 분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우에는, 중일·소련 동
화의 외교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원법 제 3조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여겨집니다. 반면, 형
법의 해석상 독특 간접죄의 경우에는 영토가 휴전선 이남의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남북간의 원해가 잇어지면서 발생가능한 범죄에 대한 규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정절차는 어떻게 할 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비가 강
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이해가 요구되다고 여
겨졌습니다.

司席者：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하무도의 발표와 일 분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후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